

[서문]

두번째 백년의 출발점,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조망

---



출처: pngwing.com

출처: pngwing.com

본 특집호는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이하 당대회)에 대한 전면적 분석을 시도한다. 이번 당대회가 지닌 시대적 의미가 중차대하다는 점에서, 즉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첫번째 백년)의 ‘소강사회(小康社會) 실현’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두번째 백년)의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실현’을 향해 나아가는 중국의 출발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를 놓고 고민한 결과를 실었다. 경제뿐 아니라 산업, 기술, 과학, 국방,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미국의 전면적 견제를 뚫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려는 중국의 치열한 응전은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자유주의의 퇴조 및 심각한 양극화 등의 복잡한 정세와 맞물려 21세기 동시대를 살아가는 전 국가와 시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시진핑 집권기에 해당하는 18차, 19차, 그리고 20차 당대회 정치보고를 비교한 결과, 아래와 같이 시기적으로 연계와 조정, 그리고 확대가 이뤄졌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소강사회’ 부분이 빠진 반면, ‘과학기술’·‘교육흥국(科教興國)(5장)’, ‘의법치국(依法治國)(7장)’, 그리고 ‘국가안전’(11장) 부분이 새로 첨가되었다. 시진핑 3기 정부가 미국과 서방의 제재국면을 맞아 첨단 과학기술 및 교육을 통한 혁신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 권력이 집중된 ‘1인 지배’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고 비판을 우회하고자 법치를 활용할 거라는 사실, 그리고 미증유의 위기 의식 속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데에 전례 없는 고강도의 심혈을 기울일 것임이 드러난다. 이러한 변화를 기반으로, 시진핑 3기 정부의 정치, 외교, 경제, 사회는 과거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또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본고에 실린 전문적 해설과 전망이 다가올 중국과의 공존에 필요한 지혜와 해법을 구상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목차  | 18차 당대회                       | 목차  | 19차 당대회                        | 목차  | 20차 당대회                                       |
|-----|-------------------------------|-----|--------------------------------|-----|---|
| 2장  | 중국특색 사회주의 달성                  | 2장  | 신시대 중국공산당의 역사적 사명              | 2장  | 마르크스주의 중국화 및 시대화의 새로운 경계 개척                   |
| 3장  | 전면적 소강사회 완성과 개혁 개방의 전면적 심화 목표 | 3장  |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기본방침        | 3장  | 신시대, 신과정 중국공산당의 사명과 임무                        |
| 4장  |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완비와 경제발전방식 전환 가속화  | 4장  | 소강사회 및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적 건설      | 4장  | 신발전 구도의 신속한 구축과 고품질 발전의 추진                    |
|     |                               | 5장  | 신발전 이념 관철을 통한 현대화 경제체계 구축      | 5장  | '과학기술·교육흥국(科教兴国)' 전략의 추진과 현대화 건설 인재 육성 강화     |
| 5장  | 중국특색사회주의 정치발전경로 고수와 정치체제 개혁추진 | 6장  | 사회주의 민주정치 발전                   | 6장  | 전 과정의 인민 민주 발전과 인민의 주인 역할 보장                  |
|     |                               |     |                                | 7장  | 전면적인 의법치국(依法治国) 견지와 법치 중국 건설의 추진              |
| 6장  | 사회주의 문화강국 건설                  | 7장  | 사회주의 문화 번영                     | 8장  | 문화 자신·자강(自信自强)의 추진과 빛나는 사회주의 문화 조성            |
| 7장  | 민생개선과 거버넌스 혁신에서의 사회건설강화       | 8장  | 민생수준 보장과 개선, 사회 거버넌스 강화와 혁신    | 9장  | 민생 복지의 증진과 인민생활의 질 제고                         |
| 8장  | 생태문명 건설추진                     | 9장  | 생태문명 체제 개혁 가속, 아름다운 중국 건설      | 10장 | 녹색발전 추진 및 인간과 자연의 조화·공생 촉진                    |
|     |                               |     |                                | 11장 | 국가안전(안보)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 추진 및 국가안전(안보)과 사회 안정의 수호 |
| 9장  | 국방과 군대 현대화 가속                 | 10장 | 중국 특색 강군 견지를 통한 국방과 군대 현대화     | 12장 | 건군 100년의 분투 목표 실현 및 국방·군대 현대화의 새 국면 개척        |
| 10장 | 일국양제와 조국통일                    | 11장 | 일국양제와 조국통일                     | 13장 | 일국양제의 견지·완비 및 조국통일 추진                         |
| 11장 | 인류평화발전 추진                     | 12장 | 평화발전 노선 견지를 통한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     | 14장 | 세계 평화와 발전 촉진 및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추동                  |
| 12장 | 당건설의 과학과 수준 제고                | 13장 | 전면적 총엄치당을 통한 공산당 집정능력과 영도수준 제고 | 15장 |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 관리 견지 및 신시대 당건설의 위대한 노정을 심화 추진    |

[정치]

## 시(習)시대의 개막, 20차 당대회

---

양갑용(국가안보전략연구원)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이하 당대회)가 끝났다. 중공당 당대회가 국내외 주목을 받은만큼 대회 결과와 영향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우려와 걱정의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시진핑 주석 개인에게 집중된 더욱 강력해진 권력은 대외적으로 공세적인 형태로 표출될 것이라는 시각이 널리 퍼졌다. 국내적으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이견의 존재를 용인하지 않는 경직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국내외 우려에도 불구하고 20차 당대회 [보고]를 통해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기치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시진핑 주석이 강조했던 여러 의견이나 견해를 집단의 결의를 통해서 <당장>에 삽입했다. 이런 점에서 중공당 20차 당대회는 사실상 시진핑 주석 ‘일인체제’의 공식 출발을 알리는 대회였다. 즉, 덩샤오핑 시대의 유산을 뛰어넘어 본격적인 ‘시진핑 시대’의 진입을 알렸다.

## 덩샤오핑 시대와 이별

5년 전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18차 당대회 이후 중국은 공식적으로 ‘신시대’에 진입했다”라고 선언했다. 특히,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은 ‘혁명과 건설, 개혁의 시대’에서 ‘혁명’, ‘건설’, ‘개혁’의 시대로 신중국 역사 시기를 삼분했다. ‘혁명의 시대’는 1921년 중국공산당 창당과 신중국 건설, 문화혁명과 마오쩌둥 사망으로 이어지는 시기이다. 마오쩌둥의 ‘무오류’의 절대적 지도자가 통치하던 시기인 동시에 계급혁명과 계속혁명이 강조되던 시기였다. ‘건설의 시대’는 문화혁명 등 좌편향의 오류를 극복하고 대내외적으로 문호를 개방하여 개혁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시기이다.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집권 시기를 말한다. 1980년대부터 18차 당대회 개최 전 2010년대까지 대략 30여 년의 시간대에 속해 있다. 이 시기는 경직된 이데올로기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실용적 사고를 통해서 중국 사회주의를 개조하던 시기였다. 가치의 옳고 그름의 판단을 오로지 경제적 성과로서 증명하던 시기였다. 사회주의 생산력 발전에 필요할 경우 자본주의 방식도 과감하게 도입했다. 그리고 심지어 이를 <당장>에 삽입하여 당국가체제 운영의 근간으로 삼기도 했다.

시진핑 주석은 그동안 명시적이며 공개적으로 개혁개방을 부정하거나 폄훼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8대와 19대를 지나오면서 끊임없이 ‘신시대’를 강조하면서

개혁개방의 유산을 덜 중시하거나 덜 강조하는 방식으로 과거와의 단절을 시도해 왔다. 시진핑 주석은 18대, 19대, 20대 [보고] 기초조 조장을 맡으면서 자신의 구상을 [보고]에 담았다. 그리고 [보고]의 내용 구성 또한 18대 12장, 19대 13장, 20대 15장으로 계속 늘려왔다. 또한, 자신의 미래 중국 건설과 비전에 대한 종합 구상을 <당장>에 삽입하여 권위를 공식적으로 확보했다. 이번 당대회의 정치 목표 내지 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당의 영도 확대 심화 △대외적으로 국가 지위 강화 △과학기술혁명의 자주화 추진 △안보 강화 등이다. 당의 영도 강화는 개혁개방 시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당위 영도가 이른바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착근시키는 근간이자 버팀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위 강화, 과학 기술, 안보 등 문제는 시진핑 시기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문제들이다. 기존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를 전면에 들고 나오면서 이전 시기와 다른 새로운 시기를 강조하고 있다. 심지어 이를 시기가 아닌 시대로 인식하면서 차별성을 드러내고 있다.

덩샤오핑 시대는 사회생산력이 가장 중요한 중국식 사회주의의 평가 기준이자 검증 수단이었다. 그러나 시진핑 시대는 이러한 경제 중심 방법론을 중시하기 보다는 역사와 시대, 인류문명 차원에서 개혁개방 시대와 단절을 시도하고 있다. 먼저, 혁명과 건설, 개혁의 시대가 아니라 혁명, 건설, 개혁의 시대로 역사를 삼분하고 있다. 개혁개방 시기의 개혁이 아니라 이전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개혁의 시대를 만들고자 한다. 둘째, G2 시대 중국의 국제적 위상은 개혁개방 시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인식을 보편적으로 갖고 있다. 더 이상 어두운 동굴 속에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때를 만들어가는 것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다. 셋째, 중국이 일국 사회주의에서 벗어나 이제는 마르크스주의를 충분히 구현하고 체화하는 인류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중국에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다짐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국가로의 변신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진핑 주석의 집권 연장은 역사, 시대, 인류 차원에서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중국을 쫓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도 덩샤오핑 시대의 유산과는 단절해야 한다는 것이 20차 당대회를 계기로 표출되었다.

## 관행 방기를 통한 시대 전환

앞서 언급했듯이 18대, 19대, 20대 당대회 [보고] 문건의 최종 책임자는 시진핑이었다. 10년 주기 집권 관행에 따르면 두 번째 임기 5년 말에 개최되는 당대회는 차기 후계자가 기초조 조장으로 미래 변화를 그려가는 역할을 부여받아왔다. 2012년 18차 당대회 [보고]는 17대 중앙위원회의 업무보고에 관한 것이었으며 보고자는 시진핑이 아닌 후진타오 당시 총서기였다. 그러나 그 문건의 기초는 차기 지도자로 올라선 시진핑에게 맡겨졌다. 따라서 18대 [보고]부터 19대, 20대 [보고]에 이르기까지 15년 동안 중국 당과 국가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오롯이 시진핑 주석의 책임 하에 설계되고 기획되었다. 그리고 그 근저에서는 기존 시대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의 기대와 열망이 녹아 있었다. 여기에 형식적인 관행의 지속이 있었고, 내용적인 관행의 파괴가 병존했다.

먼저, 형식 측면에서 세 시기 모두 관행은 방기되거나 파기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수용되었다. 예를 들어, 시진핑 주석이 기초조 조장으로 참여한 [보고]의 주제는 일관되게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지향했다. 18대는 “확고부동하게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전진하여 소강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분투하자”, 19대는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에 결정적으로 승리하고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자”, 20대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단결 분투하자”였다. 또한, 대회 개최에 이르는 과정 또한 기존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1년 6개월 전부터 [보고]에 대한 의견 수렴 작업이 시작되었다. 2021년 19기 6중전회에서 20차 당대회의 2022년 하반기 개최를 공식 발표했다. 2022년 8월 30일 정치국 회의에서는 20차 당대회 개최 날짜를 확정 발표했다. 당대회에서 논의할 내용은 2022년 9월 9일 정치국 회의에서 19기 7중전회 토론 내용 제안 형식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2년 10월 15일 대회 주석단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폐막일까지 공지하면서 회의 개최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이 기존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내용 측면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관행으로 익숙하게 알고 있던 내용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우선, ‘7상 7하(七上八下)’나 ‘격대지정(隔代指定)’ 등 지도부 교체에 관련된 덩샤오핑의 유산은 더 이상 관행의 이름으로 유전되지 않았다. 19대에서 왕치산의 은퇴 등 엄격하게 적용했던 ‘7상 8하’는 이번 20차 당대회에서 적용되지 않았다. ‘격대지정’은 이미 19차 당대회에서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음으로써 그 용도가 사실상 폐기되었다. 이러한 기존 관행 혹은 관례의 방기 내지 용도 폐기는 덩샤오핑 시기의 정치적 유산과의 고별을 의미한다. 적어도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향후 일정 기간 덩샤오핑의 정치적 유산을 재해석하거나 선택적으로 채택하면서 덩샤오핑의 유산을 지우고 시진핑 시대의 정치적 유산을 담금질하는 시간이 도래할 것이다. 이러한 출발점에 선 것이 바로 20차 당대회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관행 혹은 관례로 익숙하게 설명되어지던 많은 것들이 시진핑 시기에는 새롭게 해석되고 필요에 따라 폐기되고 용도 변경될 것이다. 20차 정치국 상무위원회 인사에서 이 점을 명확하게 보여줬고, 기존 관행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시진핑식 정치 변화의 출발을 알렸다.

## 선택적 자율성의 극대화

20차 당대회 인사 구성 관련하여 주목을 끈 것은 이른바 집단지도체제로 알려진 정치국 상무위원회 구성의 파격이었다. 18대는 원로정치의 유산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계파 간 안배를 통한 균형 인사가 이루어졌다. 공청단 계열의 리커창이 견재했고, 장쩌민 계열의 장더장, 위정성 등도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진입했다. 이러한 흐름은 19대 정치국 상무위원 구성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리커창, 왕양, 한정 등 당내 존재하는 다양한 정체 세력들이 권력을 분점하는 형태로 집단지도체제의 형식을 유지했다. 그러나 20차 당대회의 정치국 상무위원 구성은 완전한 시진핑 세력 일색으로 채워졌다. 특히 비서 혹은 직계 부하 출신이던 리창, 덩쉐샹, 차이치 등이 집단지도체제에 진입했다. 이는 그동안 부분적으로 유지돼오던 집단지도체제의 형식을 사실상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적어도 집단지도체제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한 합의 구조라는 덩샤오핑 시기 정치적 유산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집단지도체제를 형식적으로 규정하는 내규가 아직 폐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실상 무력화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집단지도체제가 작동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시진핑 주석의 이른바 '1인 체제'의 도래를 의미한다. 형식은 나중에 시간을 두고 필요에 따라 조정하면 될 뿐이다.

그러나 정치국 위원 구성이나 중앙위원 구성은 기존 관행과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고 기존 관행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정치국 위원의 구성은 18대 25명, 19대 25명, 20대 24명으로 크게 변하지 않았다. 정치국 위



원 교체 흐름 또한 큰 변화는 없었다. 18대에서는 정치국 위원 가운데 류옌둥, 왕양, 리위안차오 등 세 명만이 연임했고, 19대에서는 쉬치량과 순춘란, 후준화 등 세 명만이 연임하고 나머지는 모두 교체되었다. 20대에서는 장여우샤, 천민얼, 황쿤밍, 리홍중 등 네 명이 연임하고 나머지 13명은 모두 신규 인사로 교체되었다. 적어도 정치국 위원 인사 교체는 집단지도체제 구성에서 친정체제를 구축했던 것과 달리 기존 교체 패턴을 그대로 답습하는 등 선택적 적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집단지도체제를 완전히 장악해야 하는 필요성이 더 간절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편 정치국 위원 교체를 둘러싼 기존 관행의 완전한 파괴는 아직은 덜 중요한 문제였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적어도 점진적인 변화 과정을 가졌다는 기존 방식에서 완전히 유리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중앙위원 인사에서도 기존 관행과 유사한 엘리트 교체가 이루어졌다. 그 비율 또한 100명 정도가 교체된 것으로 18대, 19대에 비해서 현격하게 두드러진 결과는 아니다. 이는 앞서 얘기한 대로 집단지도체제를 완전히 틀어진 상황에서 급격한 변화에 다른 정치적 리스크를 줄여나가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중앙위원 정위원 가운데 여성이 11명 정도에 그친 것은 정치국 위원에 여성과 소수민족을 배려한 기존 관례에 따른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엘리트 정치의 남성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중앙후보위원 인사를 보면 세대교체의 기대와 희망이 녹아 들어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20차 당대회에서 기존 관행에 부합하는 단계별 인사를 진행하면서도 파격 발탁도 중요하게 고려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100여 명에 이른 성부급 부직 이상 '70후(後)' 인사 가운데 약 30여명 정도가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70후'들이 본격적으로 중국 정치의 이른바 파워엘리트 대열에 진입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세대교체를 통한 통치 정당성의 강화는 시진핑 주석이 새로운 정치를 펼쳐나가는데 동력인 동시에 '70후'들도 성장의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가 맞아떨어진다. 그리고 이들은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에 적극 부응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것이다.

## 새로운 정치 보장으로서 법치

집단지도체제의 완전한 장악은 향후 중국 정치 변화에서 시진핑 주석 개인의 의지가 강력한 추동력이 되고 변수가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그리고 제반 권력 강화 및 공고화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의 권력 의지는 견제와 균형이 무력화된 현 상황에서 더욱 강력하게 발현될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지나친 권력 확대는 자칫 ‘무오류’의 절대자로 간주되었던 마오쩌둥의 그림자와 오버랩되는 부정적인 효과를 차단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번 당대회에서 제시된 것이 이른바 당의 영도 강화와 법치 중국의 구현이다. 특히 전면적인 의법치국 견지와 법치 중국의 건설과 추진은 [보고]에서 독립된 장으로 따로 분리하여 강조할 정도로 향후 시진핑 3기 순항에 중요한 제도적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시기 법치나 의법치국 관련 내용은 18대 [보고]에서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정치발전 경로와 정치체제개혁에서 그리고 19대 [보고]에서는 사회주의 민주정치 발전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되었다. 그러나 이번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독립된 장으로 언급됨으로써 강력한 권력 집중으로 야기될 수 있는 이른바 ‘1인 지배’의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하고 비판을 우회하는 차원에서 의법치국과 법치를 더욱 강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법치 중국 건설이 기존 의법치국 논의와 마찬가지로 법을 통한 지배 강화의 원칙에 부합하는 가치적 개념이 아니라 법을 이용하여 통치를 효율적으로 하는 일종의 수단적 가치로 활용된다는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대 [보고] 전 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른바 당의 영도와 ‘두 개 확립’에 모든 정책과 조치가 조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국가체제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하는 차원에서 법치가 고려되기 때문이다. 즉, 중국에서 법치라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적어도 당의 통치를 원활하게 구현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이기 때문에 법치가 목적이 아닌 이상 법치 중국 건설 역시 시진핑 3기의 통치와 집권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로 활용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 시진핑 3기의 집권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으로서 법치가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법을 통한 지배를 강화하는 것이지 법에 의한 지배를 강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3기에는 법적인 구속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을 것이다. 개인의 권력이 강화될수록 그리고 개인의 의지가 정책으로 관철될수록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지를 법적인 조치로 뒷받침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그래야 개인 권위에 기초한

정책 추진의 불합리성의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고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 실행과정에서 그 근거가 되는 최고 지도자 혹은 집단 지도체제 내부의 결정이 법과 제도에 의해서 보장되는 과정이 요구된다. 가령 후춘화의 중앙위원으로 강등이라는 인사 결정 또한 이러한 내적 규정에 의해서 그 불가피성을 환기시키고 정치적 결단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예컨대, <당정 영도간부 직무 임기 잠행 규정(党政领导干部职务任期暂行规定)> 제6조에 의하면, “당정 영도간부는 동일 직위에서 연속해서 두 임기에 도달하면, 더 이상 동일 직무에 추천, 지명 또는 임명되지 않는다(党政领导干部在同一职位上连续任职达到两个任期, 不再推荐、提名或者任命担任同一职务)”. 19대에서 리위안차오와 류옌둥이 정치국 위원에서 은퇴하고, 왕양이 승진 이동하여 살아남았던 사례 역시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18대와 19대 정치국 위원을 역임한 후춘화를 상무위원으로 올리지 않는 내적 규정으로 이 조항을 활용했을 수도 있다. 이처럼 정치 변화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도 법치 강조는 매우 유용하다. 20차 당대회에서 의법치국과 법치 중국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시진핑의 장기 집권과 후계구도

20차 당대회는 사실상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의 출발을 의미한다. 20차 당대회를 시작으로 장기집권의 길에 들어선 것이 아니라 돌이켜보면 이미 18대 이후부터 꾸준히 집권 연장을 준비해왔다. 혁명과 건설, 개혁의 시기를 혁명, 건설, 개혁의 시기로 세분하기 시작하면서 이미 진정한 개혁의 시기에 적합한 자신이 오랜 기간 집권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의 정치를 지난 10년 동안 해 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8대 반부패 투쟁, 19대 소강사회 건설 매진 등 일련의 과정은 모두 20차 당대회 이후 장기집권의 길을 열기 위한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하는게 타당하다. 권력이라는 것은 한 번 잡기 시작하면 여간해서는 내려놓고 싶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10대 시절에 겪었던 옌안 토굴에서의 경험이 강력한 국가, 위대한 공산당의 신화를 만들어냈고, 그러한 이상적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권력의 획득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1945년 제7차 당대회에서 마오쩌둥은 마오쩌둥 사상을 총화하고 이를 당의 지도사상으로 당장(黨章)에 적시하면서 장기집권의 길을 열었다. 시진핑 주석 또한 ‘두 개 확립’이나 ‘두 개 수호’ 등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강력한 사상적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의지까지 발동할 경우 집권 연장은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 근거 중 하나가 바로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에 구성된 정치국 상무위원회 구성을 보면 그 안에서 후계자의 면모는 보이지 않는다. 덩쉐샹 정도가 '60후'의 선두주자로서 두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지만 그가 그동안 걸어온 길을 보면 최고 지도자로서의 경험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국내외 언론 등 다양한 관찰자들 또한 덩쉐샹이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제도적으로 현 총서기 제도를 당주석 제도로 회귀하여 관리형 총서기를 두고 덩쉐샹이 그 자리를 맡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1982년 당주석제를 폐지하고 총서기제도를 부활시켰던 당시 정치상황에서 과도한 권력을 제한한다는 주석제 폐지의 정당성이 4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유용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당주석 부활은 완전한 의미의 영구집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한층 더 신중한 조정의 과정을 거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 집단지도체제는 일시적인 과도기라고 봐야 한다. 적어도 시진핑 주석의 개인 권력 의지가 확인된 이상 자신의 권력을 스스로 제약하는 매스를 들고 자신을 수술대에 올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물리적 나이 또한 정상적인 임무 수행에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 중앙위원 이상 간부군에서 후계자를 찾을 수 밖에 없다. 누가 될 것인지는 오로지 시진핑 주석의 개인 의지에 달려 있다.

적어도 이번 최고 지도부 구성이 일시적이고 과도기적 성격을 갖는 체제라면 빨라야 5년 후에 후계자가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현 중앙위원, 정치국 위원 가운데 5년 후 21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에 진입하여 후계자 수업을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될 경우 시진핑 주석은 적어도 지금부터 10년을 더 집권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2032년 22차 당대회에서 권력 이양을 하지 않는다면 후계자를 2032년 22차 당대회에서 올리고 자신은 후계자 경험 축적 과정을 지켜본 후 2037년 23차 당대회에서 은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시나라오에서 가장 강력하게 등장하는 그룹이 바로 '70후'들이다. 이들은 앞서 지적한대로 '60후'들이 일종의 과도기 권력을 행사하고 물러나게 되면 더욱 최고 권력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고 기대를 갖고 있는 그룹이다. 시진핑 주석 또한 세대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 바람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 20대 중앙위원회 인선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70후'들이 중앙후보위원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일부는 2027년 21차 당대회에서 중앙위원에 진입할 것이다. 빠

르면 이들은 2032년 22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위원에 진입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2037년 23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에 진입하여 후계자로 등극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 차기 구도와 관련하여 필요한 것은 이들 '70후'에 대한 폭넓고 깊이있는 관찰과 분석이 필요하다. 이들과 시진핑 주석과의 이해관계를 생각한다면 20차 당대회 가장 핫한 이슈는 바로 이들의 중앙위원회 진입이기 때문이다.

[외교]

## 헤어질 결심?: 시진핑 3기 정부의 대외정책 전망

---

서정경(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 특히 외부의 기만, 억제, 봉쇄, 극한의 압박에 직면하여, 우리는 국가이익을 중시하고, 국내정치를 우선시하며, 전략적 일관성을 유지하였고, 투쟁정신을 발양하여, 강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굳센 의지를 보여주었다.”

-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정치보고 中 -

시진핑이 총서기직을 3연임 함에 따라 중국의 대외정책은 사실상 1, 2기의 연속 선상에 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2기 집권기에 중국이 미국을 포함한 서방세계의 강력한 견제에 직면했고, 따라서 국가정책의 최상위 목표, 즉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다는 사실이다. 주지하듯, 시진핑 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하나의 중심, 두 개의 기본점(一個中心, 兩個基本點)’에서의 하나의 중심, 즉 중국의 모든 대내외 정책의 최상위에 장기간 존재했던 ‘경제발전’ 목표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대체시켰다. 이로써 40여년 남짓의 시간동안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자 평화로운 대외환경 조성 zu 력했던 중국의 외교는 시진핑 집권기 들어 전격 전환되었다. 2050년까지 미국을 제치고 국제사회의 최강대국으로 등극하는데 유리한 대외환경 조성 및 대국에 걸맞는 국가관계 및 국제위상을 구축하는 것으로 외교의 중점이 이동했던 것이다. 이것이 시정부의 소위 ‘중국 특색 대국외교’였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가 중국의 예상보다 더욱 빠르고 훨씬 강력한 견제에 직면하였다. 단순히 경제뿐 아니라 기술, 산업, 문화, 군사, 정치 등 각 분야에 걸친 미국의 전면적인 견제 및 유럽의 동참(A New EU-US Agenda for global change, 2020)은 중국을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大견제의 시기’에 빠뜨렸다. 심각한 위기의식과 불안한 대외환경 속에서, 과거 덩샤오핑 시기부터 면면히 이어오던 “평화와 발전의 시대” 규정이 사라졌다. 대신 견제의 시기를 버티고 살아남기 위한 중국의 고민과 대외적 수싸움의 흔적이 이곳 저곳에 녹아있다. 피아(彼我)구분의 대립적 세계관이 강해졌고, 기존 외교구도를 재정비함으로써 우군을 확보하면서도 외부의 견제에 말려들지 않으려는, 그러면서 내부의 체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해외를 잇고 성장세를 이어나가려는 중국의 절박한 몸부림이 집권 3기에 이어질 전망이다.



## 강한 위기의식 속 자기 중심성의 심화

[보고]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강화된 중국의 위기의식과 부정적인 시대인식을 표출하였다. 19차 당대회 보고는 과거 5년 평가시 “전방위적, 다층적, 입체적 외교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나라 발전을 위한 양호한 외부조건을 조성하였다”며 일대일로, AIIB 발기, 실크로드 기금 설립, 일대일로국제협력정상포럼, APEC정상회의, G20항주정상회의, BRICS샤먼회담 등 성과를 열거하였다. 반면 [보고]에는 그런 내용은 다 빠지고, 국제 공평정의를 수호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며, 패권주의와 강권정치, 일방주의, 보호주의, 집단 따돌림에 반대했음을 적시하였다. “당중앙이 전당 전군 전국 각 민족 인민들로 하여금 엄중하고 복잡한 국제정세와 끊임없이 나타난 거대한 리스크의 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이끈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라는 것이다.

인류가 당면한 공동 도전과 문제에 대한 중국의 진단도 과거보다 복잡해졌다. 18차 때는 전 세계 금융위기, 강대국의 패권주의, 강권정치, 신간섭주의, 국제적인 혼란 그리고 지구적인 비전통 안보문제가 제시되었고, 19차 때는 전 세계적 불안정성, 불확정성, 경제침체, 빈부격차, 역내 핫이슈, 테러리즘, 인터넷 안보, 전염병, 기후변화 등이 제시되었다. 강대국에 대한 비판적 언급이 빠진 것이다. 그런데 [보고]는 팬데믹의 영향, 반세계화 사조, 일방주의, 보호주의, 세계경제 회복의 지체, 국부적 충돌과 불안정사태, 지구적 문제의 심화 등을 제시한 것 외에도, “자기 힘을 믿고 약자를 괴롭히며, 남의 재물·권리 따위를 교묘한 수단이나 힘으로 빼앗고, 제로섬 게임 등 패권적, 패도적, 집단 따돌림적 행위의 위해성이 심각하며, 평화 적자(赤字), 발전 적자, 안전 적자, 거버넌스 적자가 가중되고 있어, 인류사회가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하였다”고 밝혔다. 즉 미국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자제했던 19차 때와 달리 매우 직설적이고 강한 어조로 미국을 다시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과거엔 중국이 비교적 객관적인 관점에서 인류의 현안을 인식했다면, 강한 압박과 견제에 직면한 지금의 시점에서 중국은 자신의 관점, 즉 자신이 당면한 도전을 공동이 당면한 도전으로 치환시킴으로써 주관성을 배가시켰다.

분열되고 적대적인 세계관이 심화되는 가운데 자신을 정의의 편으로, 미국 등 서방세계를 비도덕한 세력으로 구분 짓는 도덕적 레토릭도 과거에 비해 더욱 강해졌다. “세계는 또 다시 역사의 교차로에 서게 되었고, 어디로 갈지는 각국 인민들의 선택에 달렸다”며 정의로운 자신을 선택하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였다. 국제사회를 선과 악의 구도로 양분하며 자국의 정의로움을 강조하는 도덕적

레토릭과 자세는 3기 집권기에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인류운명공동체’ 담론은 더욱 힘을 받는 형국이다.

### ‘중국 특색 대국외교’의 좌절 감추기 : ‘인류운명공동체’의 확대

중국의 대국외교(大國外交)는 원래 ‘강대국, 즉 미국, 소련, 서방 선진국들을 대상 (toward)’으로 하는 외교를 의미했지만, 국력의 강화에 따라 점차 ‘강대국이 된 (as) 중국 자신의 외교’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시진핑 정부의 ‘중국특색 대국외교’는 강대국 대상 외교에서는 ‘신형 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제시하였고, 강대국으로서의 외교에서는 ‘책임지는 대국(負責任的大國)’ 면모를 부각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전면적 압박과 바이든 집권기 EU의 중국견제 동참에 맞닥트림으로써 신형 대국관계를 핵심으로 하는 강대국 대상 외교는 사실상 실패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아울러 ‘일대일로’의 빚함정 오명, 백신외교에 대한 비판 및 전 세계 중국 여론의 악화로 인해 강대국으로서의 외교도 빛을 바랬다. ‘중국특색 대국외교’는 사실상 무색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진핑 1, 2기 정부의 외교를 포괄하는 가장 중요한 틀이자 일종의 브랜드라는 점에서 [보고]는 과거 5년의 ‘중국특색 대국외교’가 성과를 얻었다며 자찬하였다.

[보고]는 향후 강대국 대상 외교 부분에서 ‘평화적 공존’과 ‘약한 고리 공략’에 중점을 두었다. “대국 간 조율과 양성적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대국관계의 구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하였는데 이는 19차 정치보고와 비교해 ‘협력’이 ‘양성적 상호작용’으로 툰다운 된 것이다. 협력은 안되더라도 충돌은 최대한 지양함으로써 강대국과의 안정된 관계 유지에 계속 주력할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대국관계의 구도”란 사실상 중국에 적대적인 강대국과 그렇지 않은 강대국을 구분하여 후자와의 관계 강화를 시도하겠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최대한 충돌하지 않되, 약한 고리를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당대회 직후 독일 솔츠 총리와 회담을 갖고 무역과 경제협력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과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EU의 중국견제 대오를 흔들겠다는 의도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일치단결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에 비해, EU의 여론은 양분될 수 있음을 중국은 잘 알고 있다.

대국으로서의 외교 관련, 시진핑 3기 정부는 서구와의 차별성 강조에 더욱 주력할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인류운명공동체’ 담론은 더욱 확대·강조될 것이다. 본 담론은 원래 시진핑 1기 정부가 주변외교의 위상을 크게 제고시키며 주변국을 대상으로 한 ‘운명공동체’ 담론으로 시작했다가, 이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인류운명공동체’로 개념이 확대된 것이다. 향후 분열된 세계 속의 피아구분적이고 현실적인 대처와 더불어 ‘중국특색 사회주의 국가’로서 송고한 이념과 꿈을 드러내는 레토릭으로서 활용도가 더욱 커졌다. ‘중국특색 대국외교’가 단지 중국몽에 기여하는 자기이익 실현도구에 불과하다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듣기 다소 불편한 비판을 희석시키는데 유용할 뿐 아니라, 더 많은 우군을 확보하는데에도 활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 우군 확보에 진심인 중국 : 개도국의 리더로서 상·하 관계 도모

[보고]에는 개도국과의 관계 강화에 관한 내용이 다양한 맥락에서 풍부하게 담겨 있다. 시진핑 3기 정부의 ‘개도국외교’와 ‘주변외교’는 2기보다 더욱 강화될 것이다. 18차 보고에서 강조된 ‘해양대국’ 용어가 19차 때 톤다운 되었다가 이번 [보고]에서 자취를 감추고, 안보 관련 부분에서 “해양권익을 수호한다” 정도로 처리된 것도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 가능하다. 주변에 위치한 동남아 개도국들의 경각심을 완화하고 관계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이처럼 중국이 개도국과의 관계 강화를 중시하는 이유는 국제사회 및 주요 기구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개도국을 자국진영화 함으로써 미국 중심의 반(反)중국 진영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미국은 특히 WTO, G7, G20, TTC 등을 중국견제의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고]는 UN뿐 아니라 WTO, APEC 등 다자간 기제가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도록 추진하고, 자국이 주도하는 BRICS, SCO 등 협력기제의 영향력을 확대하며, 글로벌 사안에 대한 신흥시장 국가와 개도국의 대표성 및 발언권을 증대시킬 것이라 명기함으로써, 개도국과 연대하여 국제기구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의도를 드러냈다. 최근 서방이 주도한 50개 국가가 유엔 총회에서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자 중국 정부가 “거의 100개 국가가 유엔에서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 중국을 지지한다”고 주장한 것이 사례라 할 수 있다. 19차 때와 비교시, [보고]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의 개혁 참여 관련 내용이 늘었고, 내용도 구체화 된 것으로 미뤄보

아 향후 중국의 다자외교도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

흥미로운 사실은 개도국을 대하는 중국의 관계구도 설정이 과거에 비해 보다 위계화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보고]에는 19차 보고에는 없는 “개도국의 공동이익을 수호하겠다”는 표현이 첨가되었다. 이것을 중국의 자기 정체성 변화와 연관지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차 정치보고에서 중국은 스스로를 ‘세계 최대의 개도국’이라고 언급했지만, 이번 [보고]에는 그러한 표현이 사라졌다. 과거 모택동 시기 중국이 소련과 미국과 동시 저항하는 과정에서 제3세계를 끌어안음으로써 외교공간을 확보한 것은 개도국 정체성에 기반하여 개도국과의 수평적 연대를 표명했던 것이었다면, 이제는 중국이 강대국 정체성을 가지고 개도국과의 상·하관계를 스스로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19차에는 나타났던 비동맹 입장이 [보고]에서 사라졌다는 사실과도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동반자 관계를 맺되 동맹은 맺지 않는다(結伴而不結盟)’는 표현은 사라지고, 동반자 관계를 중시한다는 의미의 표현은 거듭 등장하였다. 사실상 중국은 러시아와 군사훈련을 정기적으로 실행함으로써 넓은 의미의 동맹에 해당하는 행태를 보이면서도, 공식적으로는 동맹에 반대한다는 이중적 입장을 취해왔다. 중국의 대표적인 현실주의자인 옌쉐통(閻學通) 교수는 ‘러시아가 동맹을 냉전의 유산이라 비판하면서도 사실상 동맹을 맺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도 미국을 대체하는 최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개도국들과 군사동맹을 맺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안보가 불안한 개도국들의 안보불안을 해소해줌으로써 권위를 얻고 신국제질서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볼 또 하나의 현상은 19차 보고에서 대외정책을 다룬 챕터의 제목은 ‘평화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한다’였는데 [보고]에서 ‘세계평화와 발전을 촉진하고,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한다’로 바뀐 것이다. 즉 ‘평화발전의 길을 견지하겠다’가 ‘세계평화와 발전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으로 미묘하게 바뀌었다. 평화를 원하지만, 필요하다면 평화를 희생시키고 무력을 동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과 같은 맥락이다. 지금처럼 중국의 군사력이 계속 빠르게 강화되고, 아프리카 지부티에 첫 해외 군사기지를 설립하는 등의 해외확장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중국과 다수의 개도국들 간 군사적 유대관계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길으로는 중국이 강대국으로서 빈국과 개도국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포장되겠지만, 사실상 빈국과 개도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뿐 아니라 국제 안보구도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추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중국식 현대화’를 통한 자국의 힘 충전 : 개도국과 서구 첨단기업 끌어들이기

20차 보고에 처음 등장한 ‘중국식 현대화’는 미국과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내 제 분야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것에 중점이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보고는 “지금부터 중국공산당의 중심임무는 바로 전국 각민족 인민을 단결시키고 인도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두 번째 백년의 분투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다.”라며 이를 위한 방식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제시하였다. 미래 5년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전면적 건설을 위해 국면을 열고 발을 내딛는(開局起步) 관건시기”라고 규정하며 제시한 대부분의 임무, 즉 경제의 고품질 발전, 과학기술의 자립자강, 신발전구조, 현대화 경제체제 건설,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개방형 경제 신체제, 전과정 인민민주의 제도화, 규범화, 체계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법치체계, 기본 공공 서비스의 균등화, 다층적 사회보장체제,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효율성, 건군 백년의 분투목표 등은 모두 국내체제 전반의 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것들이다.

2007년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가 중국을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침해하는 국가로 규정하고, 다음 해인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발하며 서구 모델의 취약성과 한계가 드러난 이후 2009년 중국에서 “체제의 경쟁력(優勢)”이란 개념이 처음 등장하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백악관 보고서를 통해 미중관계를 두 체제 간 장기적 전략경쟁관계로 규정하자 중국학계와 사회에서도 미중경쟁은 더 이상 경제성장률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닌 체제경쟁력을 둘러싼 경쟁이며,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라는 응전의 심리가 형성되었다. 이번 [보고]에서 소강사회의 실현을 치하한 것, 또한 예전에 없던 과학기술 부분이 5장에 새로 삽입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은 첨단기술 등 중국의 경제/산업/과학기술의 혁신과 고도화에 필요한 외부자원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동맹을 규합하고 있고, EU도 가세하기 시작했다. “교육, 과학기술, 인재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전면적 건설을 지탱하는 기반이자 전략이다. 반드시 과학기술이 제일 생산력, 인재가 제일 자원, 혁신이 제일 동력이 되도록 해야한다.”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체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절박한 목소리이다.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가 강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이는 중국의 대외환경 개선에 다음과 같은 실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첫째, 개도국들에게 중국모델의 우수성을 선보이고 전파함으로써 자국의 권위와 영향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소위



민주를 강요하고 내정을 간섭하는 미국이 아닌, 중국의 편으로 끌어오는데 더욱 유리하며, 이는 결국 미국 중심적 기존 글로벌 거버넌스를 중국에 유리하게 재편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둘째, '쌍순환 전략'은 우선 국내순환, 즉 국내의 거대한 수요에 기반한 내재적 활력과 역량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반드시 해외 양질의 기술 및 자본과의 결합을 요구한다. 중국 체제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활력이 돌면서 시장이 생성되면, 이는 해외 우수 대기업들로 하여금 자국 정부의 입장과 무관하게 중국시장에 접근하고 투자하려는 더욱 강한 욕구를 갖도록 유도할 수 있다. 한가지 더 주목하자면, 첨단과학기술의 자립자강 실현을 가속화하고 국가 전략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독창성 있고 지도력 있는 과학기술 확보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문구이다. 이는 중국이 미국 중심적 규범이나 질서가 기구축돼 있지 않는 신기술 분야에 향후 더욱 주력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미 배터리, 태양광,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향후 미국 기술패권의 공백을 파고드는 중국과 이를 막으려는 미국 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대만이슈의 민감성 낮추기 : 대만국민의 여론 분열 시도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방문이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다. [보고]에서 19차 때 없었던 '무력사용 가능' 언급이 공식 등장한 것에 대하여 대만해협 전쟁 시간표가 빨라진 것이라는 일각의 해석이 있다. 그러나 이는 대만문제의 민감성이 제고되는 시점을 맞아 중국이 대만인의 여론 분열을 획책하고 이슈의 조기 점화를 경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홍콩 사태 이후 독립을 선호하는 대만내 여론이 확산되는 추세는 중국의 통일 추구에 불리할 뿐 아니라,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기에 중국으로선 큰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중국에게 양안통일은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목표이지만, 시간표는 길게 잡아 2050년까지이며, 그 전에 미처 확실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만문제가 불거져 무력충돌이 발발하는 사태는 제재국면을 헤쳐나가야 하는 중국에게 치명적이다. 지금 같이 민감한 시기에 대만에게 무력을 감행할 경우, 서방국가와 국제사회에 중국이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의 축(axis)으로 인식되는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중국이 전 세계의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 중국의 지속 성장 보장에 필수적인 반도체 등 첨단기술과 자본을 제공 받

을 수 있는(국내와 국제의 순환) 대만은 물론이고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도 파탄날 수 있다.

대만과의 통일 실현에 필요한 압도적인 군사력과 확실한 국방능력이 아직 담보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대만이슈의 조기 접화는 중국몽 실현에 막대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중국이 원하는 시나리오가 아니다. 대만 독립이슈가 불거졌을 때 만일 무력한 모습을 보인다면 중국공산당은 국내여론의 강한 역풍에도 직면하며 집권 명분에서 치명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최대한의 성의,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평화통일의 앞날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무력사용을 포기한다고 절대 승낙하지 않으며, 필요한 모든 조치의 선택지를 보류할 것이다. 이것은 외부세력의 간섭, 극소수의 대만독립 분리분자 및 그들의 분열활동을 겨누는 것이지, 절대로 광대한 대만동포를 견준 것이 아니다”에는 대만국민들의 여론을 분열시킴으로써 2024년 초 대선을 계기로 대만독립 이슈가 국제사회에 접화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담겨있다.



[경제]

## 중국 경제와 저성장의 덫

이현태(인천대학교 중어중국학과)



## 시진핑 집권 10년 경제 평가: 절반의 성공

### 주목할 성과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이하 [보고])는 1장‘지난 5년의 업무와 신시대 10년의 위대한 변혁’에서 주요 경제 성과로 크게 2가지를 내세우고 있다. 첫째, ‘경제력의 역사적 도약’이다. 이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012년 8.92조 달러에서 2021년 15.8조 달러로 늘어났고 세계 경제의 18.5%를 차지했다(그림1). 미국 GDP의 77.6%에 육박하는 세계 2위로 부상하면서 유럽연합(EU)의 전체 GDP도 넘어섰다. 2012~2021년 연평균 성장률(CAGR)이 6.6%로 글로벌 국가들 중에서 7위에 해당한다. 동기간 전세계 GDP는 2.6% 성장했는데, 중국이 전체 성장의 30% 이상을 기여했다. 이에 중국의 1인당 GDP도 2012년 6,592달러에서 2021년 11,188달러로 연평균 6.1% 증가하면서 중진국 수준에 올라섰다. 반면, 2012년 중국과 비슷한 1인당 GDP를 기록했던 남아프리카, 벨라루스, 보츠와나 등의 국가들은 대부분 2021년에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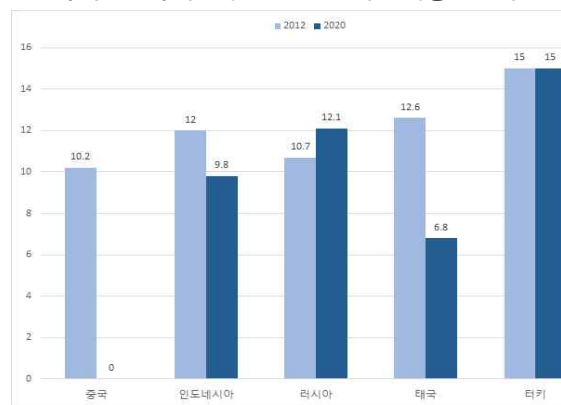
〈그림1〉

시진핑 시기 중국의 경제성장 추이



〈그림2〉

국가별 국가 기준 빈곤인구 비중 변화



(주) 2015 불변가격(USD) 기준.

자료출처: Census and Economic Information Center.

자료출처: World Bank.

둘째, 절대빈곤 퇴치를 통한 소강사회 달성이다. [보고]는 중국이 인류 역사상 최대의 빈곤 퇴치 투쟁에서 승리했고 세계 빈곤 감소에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다. 2012년 10.2%에 이르던 국가 기준 빈곤율은 2020년 0%로 떨어지면서 절대빈곤이 해소되었다(그림2). 반면, 2012년 중국과 비슷한 빈곤율을 기록했던 러시아, 인도네시아, 터키 등 다른 국가들은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하루 2.15\$(2017 PPP 기준) 이하로 사는 빈곤인구 비중도 2012년 8.5%에서 2021년 0.1%로 감소하면서 유사 국가들의 성과를 능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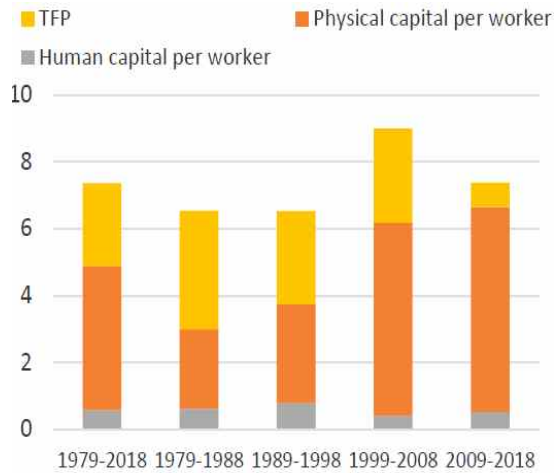
이 외에도 [보고]는 적극적인 개방 전략으로 수준 높은 자유무역 네트워크와 일대일로를 구축하면서 상품 무역 규모, 외국인 투자 유치, 외환보유고 등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한 점, 꾸준한 과학기술 자립 정책으로 우주항공, 심해탐사, 양자정보, 바이오 등 핵심산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연구개발비 세계 2위, 연구 인력 수 세계 1위를 차지한 점, 지속적인 중요 인프라 건설을 통해 세계 최대의 교통·통신 인프라 시설을 구축했다는 점, 사람 중심의 발전 이념을 준수하면서 도시 지역 연평균 고용을 1,300만 명 이상으로 끌어올렸다는 점들도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 미완의 과제

다만 중국이 [보고]에서 언급하지 못하는 미완의 과제도 있다.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의 부진이 그것이다. 이는 2011년 3월 양회의 [12.5규획]과 2012년 18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된 핵심 경제 전략으로 민생 개선, 생산성 제고, 지속가능성 확보를 포괄한다. 경제적으로는 보면, 공급 측면에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이 강조되면서 요소 투입 확대보다는 생산성 향상, 자원 효율성 제고, 환경개선 등을 동반하는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수요 측면에서는 ‘투자·수출 주도 성장에서 내수(가계소비)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이 추진되었는데, 이는 그간의 성장 과정에서 수요 측면의 불균형이 심각해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함이었다. 즉,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은 개혁 개방 이후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중국 경제의 수요-공급 측면에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그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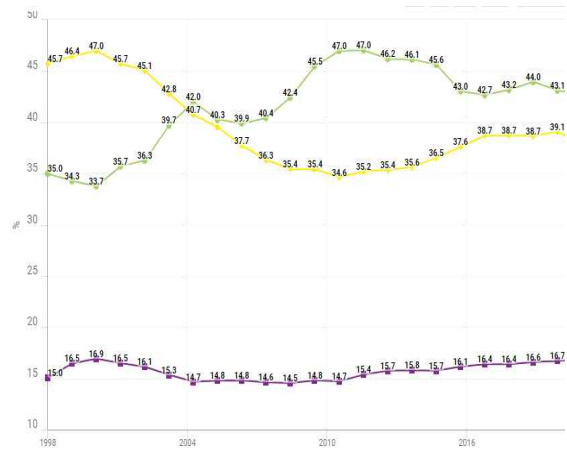
중국의 총요소생산성 추이



자료출처: Loren Brandt. et al. (2020).

〈그림4〉

지출 부문별 GDP 비중(%)



자료출처: Census and Economic Information Center.

그러나 전략이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림3〉은 개혁개방 이후 공급 측면의 총요소생산성(TFP) 변화를 나타낸다. TFP는 노동, 자본 투입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GDP 증가분을 의미하며 경제 시스템의 효율성과 질적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중국의 TFP는 1979~2008년 연평균 3.1% 성장하면서 노동생산성 증가에 40% 정도 기여했으나 2009~2018년에는 연평균 0.7% 성장하면서 기여율이 10% 내외로 줄어든다. 반면, 물적 자본 투자의 기여율은 80%까지 상승한다. 금융위기 이후 과잉투자로 투자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 상태이기에 동일한 GDP 증가를 위해서 필요한 투자량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경제 성장은 결국 한계에 부딪치고 막대한 부채를 남긴다. 수요 측면에서도 가계 소비의 비중 증가가 느리고 여전히 투자의 비중이 높다. 가계소비의 GDP 비중은 2016년 38.7%를 기록한 후 정체되다가 2021년 38.5%로 소폭 감소하였다(그림4). 반면 동기간 투자의 GDP 비중은 약 43%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소비 및 투자가 일반적으로 GDP의 약 50~60%, 20~30%를 차지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예외적으로 투자 비중이 높다. 요컨대, 중국에서는 공급 측면에서 TFP 증가를 견인하는 기술진보, 제도개선, 규제완화, 경영혁신 등이 여전히 미흡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가계가 GDP에서 받아가는 몫(임금, 연금, 복지 등)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가계 소비 증대가 정체되고 있다. 양자는 부채에 바탕을 둔 비생산적 투자로 상호 연결되면서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결국 10년 전 중국이 제기한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은 아직 요원하며 체제개혁, 기술진보, 소득불균형 해소, 사회보장제도 구축 등과 맞물려 해결이 난망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지난 10년 기간에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자리를 굳혔다. 절대빈곤 해소도 통계의 신뢰성 논란이 있지만 큰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장기 과제인 경제 구조의 질적 전환에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공급(생산)과 수요는 모두 투자에 지나치게 기대고 있어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비효율적 투자에 의존하는 불균형 성장은 장기 지속이 불가능하다. 이를 반증하듯이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3년에 평균 1%p씩 하락하면서 중국 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시진핑 3기를 맞이하는 2022년 현재,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전략적 경쟁 등 중국을 둘러싼 거시 환경도 좋지 않다. 따라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국이 이번 당대회에서 어떤 경제 비전과 전략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었다.

## [보고]의 경제 전략·정책

[보고]의 전체 15장에서 경제와 주로 관련된 장은 △ 중국식 현대화(3장) △ 신발전구도 구축(4장) △ 과학기술·인재 육성(5장) △ 공동부유(9장) △ 경제안전(안보)(11장)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7년 19차 당대회 보고, 2021년 [14차 5개년 계획] 등에서 제시된 경제 비전·전략·정책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일부 보완되었다. [보고]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들이 소개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중국식 현대화, 신발전구도, 공동부유 등 핵심어를 중심으로 [보고]에서 드러난 경제적 의미를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해 보고자 한다.

### 새롭지만 새롭지 않은 ‘중국식 현대화’

[보고]는 중국식 현대화란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로, 모든 나라의 현대화라는 공통의 특징과 민족적 조건에 기초한 중국적 특징을 겸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중국적 특성으로 거대한 인구 규모, 전체인민 공동부유,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조화, 자연과의 공생, 평화적 발전이 제시되었다. [보고]는 이렇게 중국식 현대화 개념을 제시한 후 2035년까지 중국식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이를 토대로 21세기 중반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분투

한다고 선언하였다. 이 목표는 19차 당대회보고와 14차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사회주의 현대화 일정과 일치한다. 중국식 현대화는 이번 [보고]에서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나 내용은 새롭지 않다.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의 현실에 맞게 거대한 인구, 공동부유, 사회주의 정신문명, 친환경, 평화발전의 현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중국공산당은 중국 현실에 맞는 중국‘특색’사회주의를 통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고 있다고 선전해왔고, 방대한 중국특색사회주의 체계 안에 저런 중국적 특성들은 이미 반영되어 있었다. 따라서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중국공산당이 과거와는 다른 경제적 비전을 제시했다고 보긴 어렵다. 오히려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특색(중국식)사회주의’라는 이념과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라는 목표를 결합하여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개념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여하튼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특색사회주의와 함께 향후 경제 비전의 핵심 슬로건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중국의 중국식 현대화 전략은 미국과의 체제 경쟁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도 보인다. 중국식 현대화의 내용은 거대 인구에 관한 항목을 제외하면 모두 對 서방 자본주의 비판에 기초해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식 체제를 사회불평등, 환경 파괴, 호전적 제국주의 등의 원인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중국식 현대화 강조는 중국은 그런 서구식 현대화를 따르지 않고 공동부유, 친환경, 평화로 향하는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다. 따라서 미중 체제 경쟁에서 중국은 물러설 생각이 없으며 이에 따라 경쟁은 더욱 격화될 거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 종합적 경제전략 제시: 고품질발전과 신발전구도

[보고]는 3장에서 ‘고품질발전과 신발전구도 구축’을 중국 경제발전의 기본 목표이자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2012년 18차 당대회의 ‘경제발전 방식 전환 가속화’에서 2017년 19차 당대회의 ‘신발전이념 관철을 통한 현대화 경제 시스템 구축’에서 진화 발전해온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신발전이념, 공급측 개혁, 내수확대, 현대화 경제체제 확립, 도농융합 및 지역협조발전 등 기존 전략들과 19차 당대회 이후 중국이 미중 전략적 경쟁, 코로나 팬데믹 등을 겪으면서 새로 정립한 전략인 국내대순환을 주체로 하는 쌍순환, 산업망·공급망 안정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보고에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경제 전략이 제시되었다고 보긴 어렵다. 비록 ‘신발전구도’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오긴 했으나, 전체적으로 보

면 19대에서 제시된 기존의 전략 틀을 유지하면서 최근 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여러 전략들이 함께 포함된 것이다.

고품질발전과 신발전구도 구축을 위한 시행 항목으로는 고수준 사회주의 시장 경제체제 건설, 현대 산업 시스템 정비, 농촌 진흥, 지역발전 촉진, 대외개방 확대가 포함되었다. 또한 중국이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한 ‘6+1+1’ 구조의 ‘강국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KIEP, 2022) ‘6+1+1’에서 ‘6’은 현대 산업 발전을 통한 △제조강국 △품질강국 △우주항공강국 △교통강국 △네트워크 강국 △디지털 강국이며 첫 번째 ‘1’은 농촌진흥을 통한 농업 강국, 두 번째 ‘1’은 대외개방 확대를 통한 무역강국을 의미한다. 또한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자원배분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인정하는 내용이 이번에도 포함되었지만 동시에 국유부문을 더욱 우월하고 크게 만들겠다는 내용도 강조되었다. 그리고 최근 미중 기술 경쟁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던 기술특화 중소기업 육성책인 전정특신(专精特新,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혁신성) 정책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 갈 길이 먼 공동부유

공동부유는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일부로 포함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개혁개방으로 성취한 경제성장의 성과를 인민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여 불균형과 불평등을 해소하여 2050년까지 공동부유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2021년 소강사회 달성을 선언한 이후 중국공산당은 공동부유 노선을 더욱 구체화하기 시작한다. 2021년 8월 중앙재경위원회에서 공동부유 추진 로드맵, 공동부유의 4대 원칙, 6대 추진방향을 제기하였다. 동년 6월에는 저장성을 공동부유시범구로 지정하고 저장성에서 2035년까지 빈부격차를 줄이고 기본적으로 공동부유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20차 [보고]에서도 공동부유는 중국식 현대화의 구성요소로 규정되었고 ‘민생 복지 증진과 인민생활의 질적 제고’를 다룬 9장의 분배제도 개선 항목으로 포함되었다. [보고]는 분배제도는 공동부유의 기초제도라고 규정하고 1차 분배(시장의 기능적 분배), 2차 분배(정부의 재분배), 3차 분배(기부 등 공익자선 활동)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1차 분배에서 노동소득 비중 증가, 저소득층 소득 증가, 중산층 확대 등이, 2차 분배로는 조세, 사회보장, 이전지출 등 조정 역량 강화, 3차 분배로는 기업·조직·개인의 공익자선사업 지원



추진 등이 제시되었다. 동시에 개인소득세 정비, 소득분배 절차 및 재산축적 메커니즘 규범화, 합법소득 보호 등도 추진한다.

19차 당대회 보고와 비교하면 구체적으로 1, 2, 3차 분배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틀 안에서 공동부유 정책을 열거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또한 중산층 확대, 노동소득 증가, 정부 재분배 역량 강화 등 1, 2차 분배에 대한 내용은 19차와 유사하나 3차 분배에 관한 내용은 새롭게 포함되었다. 중국 정부가 최근 공동부유의 명목으로 알리바바, 텐센트 등 여러 민간 기업들에게 기부금을 받아 왔는데 이것이 [보고]에도 명문화된 것이다. 다만 19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2050년까지 공동부유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겠다는 목표가 이번 [보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확정적인 목표 일정을 제시하면서 공동부유를 높은 수준까지 실천하기란 매우 어렵다. 분배개선을 위해 검증된 처방은 2차 분배인데,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세, 부동산세, 상속세 등을 강화하고 이를 사회보장체제 구축 등 저소득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고소득층이 공산당원 그룹과 겹치기에 이런 시도가 얼마나 가능할지 의문이다. 반면 법정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거나 기업 경영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몫을 조정하는 1차 분배나 기업에게 공동부유를 위한 기부를 다그치는 3차 분배는 기업과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어 시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동부유가 19차에 이어 20차 보고에도 포함되고 현재 중국공산당이 강조하는 방향임은 분명하나 실질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효과가 나올 때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9차 당대회 보고의 일정에 따르더라도 공동부유는 2050년이 되어야 '기본적'으로 실현되는 수준일 것이다.

### 인구감소와 미중경쟁에 대비하는 과교흥국(科教兴国)과 경제안보

과교흥국과 경제안보는 20차 보고에서 새로운 장(Chapter)으로 등장하면서 최근 중국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었음을 입증하였다. 우선 5장 '과학기술·교육흥국(科教兴国) 전략의 추진과 현대화 건설 인재육성 강화'는 과학 기술 교육과 인재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작한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위한 제1의 생산력은 과학기술이고, 제1의 자원은 인재이며, 제1의 동력은 혁신이라고 명시했다. [보고]는 3장에서 2035년까지 높은 수준의 과학 및 기술 자급자족을 달성하자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5장에서 '인민을 만족시키는 교육 실시',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구축', '혁신주도 발전전략 강화', '인재강국 건설'로 목표 달성 방

안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 인재풀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국제 인재 교류 강화’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19차 보고에는 없던 내용으로 중국이 미중 경쟁 속에서 전략 산업 발전을 위한 고급 외국 인재를 적극 유치할 거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교육 강화를 통한 인재육성은 중국이 최근 직면하고 있는 생산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 동력의 하락은 인적자본 향상을 통한 노동생산성 증가로 대응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교육을 강화하여 교육 수준을 높여야 한다.

반면, 경제안보는 이번 보고서에서 처음 포함된 개념으로 11장 ‘국가안보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 추진 및 국가안보와 사회 안정의 수호’에 인민안보, 정치안보와 함께 국가안전의 일부로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중점 분야의 안보 역량 강화를 강화하며 식량, 에너지 자원, 중요 산업망·공급망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미중 경쟁,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년간 중요 공급망 안정에 충력을 기울여온 중국의 고심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또한 경제안보를 국가안전의 틀 속에서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것도 특징적이다. 상기한 원인들로 분절되고 있는 글로벌 산업망·공급망 흐름 속에 중국이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국가안전 차원에서 총력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이다. [보고]의 서두에서 사회주의 현대화강국 건설을 위해서 발전과 안전이라는 두 개의 기둥이 밀받침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국가안전은 20차 당대회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주제로 떠올랐는데, 경제안보도 이런 맥락에서 강조되고 있다.

## 평가와 시사점

작금의 중국 경제 현실과 [보고]에서 제시된 경제 전략을 종합해서 평가해보면, 앞으로 중국에는 두 가지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는 경제의 저성장 흐름이다. 중국 경제는 장기적으로는 총요소생산성 하락, 과도한 투자 의존, 생산인구 감소로,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경쟁 격화 등으로 성장 동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다. 물론 2023년 제로코로나 정책이 해제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면 일시적으로 성장률은 반등할 수 있다. 그러나 시진핑 1, 2기에도 개선되지 못한 경제 구조 불균형은 계속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게다가 이번 [보고]는 18~19차 보고와는 달리 ‘경제 발전 방식의 전환’에 대해서 별로 강조하지 않고 있다. 최근 대내외 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

한 쌍순환 전략, 공급망 안정 등 새로운 이슈들이 경제 전략에 포함되면서 경제 구조 개혁의 전략적 중요성이 줄어든 느낌이다. 또한 이번 [보고]의 경제 전략들에는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중국식 현대화 전략을 통해 발전 목표를 복수로 설정했는데, 발전 목표가 복수가 되면 경제 성장에 자원을 집중하기가 어렵다. 물론 친환경이나 공동부유 정책 실행이 경제 성장에도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그 반대도 가능하다. 그리고 아래 살펴볼 정부의 개입 강화도 민간부문 활력 저하와 국유부문 개혁 지체로 이어져서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 번째 경향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강화이다. 중국공산당은 자국의 사회경제체제를 ‘중국특색사회주의 시장경제’로 규정하고 있지만 학계에서는 중국의 현재체제를 자본주의의 일종인 ‘국가자본주의’로 보고 있다. 그리고 2013년 시진핑 정부가 출범한 이후 그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도 대부분 동의한다. 지난 10년간 국유기업은 더욱 대형화되고 지배력을 강화했으며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 개입도 늘어났다. 예를 들어, 민간 기업에 지분 투자 혹은 합작 투자를 하는 국유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혼합소유제가 국유기업이 민간부분에 영향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2017년 19차 당대회, 코로나팬데믹 국면을 거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공동부유 혹은 사회 안정이라는 명목 하에 민간 기업에 대한 공산당·정부의 직접적인 관리 통제가 강화되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 같은 민간 대기업은 생존을 위해 정부에 협조를 구하고 기부금 납부와 같은 지시에 따르고 있다. 게다가 이번 [보고]는 중국공산당이 앞으로도 국가자본주의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공동부유의 1차, 3차 분배에 대한 강조, 국유부문 강화에 대한 언급, 국가안전과 경제안보의 연계, 발전 목표의 복수 설정 등이 모두 정부의 개입이 증가될만한 요인들이다. 이런 국가자본주의 강화는 경제체제의 효율성을 저해하여 저성장의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듯 한국은 장기적으로 이전과 사뭇 달라진 중국 경제를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저성장이 지속되고 정부 개입이 더 강화된 중국 경제다. 중국의 고성장에 기대어 수출 대국으로 성장해오고 많은 자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한 한국에는 반갑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20차 당대회에서 나온 전략·정책들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을 더 높여주었다. 물론 중국은 도시화율 제고,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 창업 열기 등 등 성장 잠재력이 여전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중국 정부도 민간 부문이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알기에 민간의 활력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개입을 조절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쁜 상황에 대한 대비에 지나침이란 없다. 2017년 19차 당대회 직후 5년 후인 2022년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분쟁으로 이렇게 어렵게 흘러가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불확실성이 한없이 높아진 시대, 다른 중국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사회]

(신)시대유감:

높은 불확실성과 침묵 사이의 중국 사회

윤종석(서울시립대학교 중국어문화학과)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깃발을 높이 들고,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건설을 위해 단결하여 분투하자!  
-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정치보고1) 中 -

## 중공 20차 당대회를 보는 사회의 시선: 복잡한 시선, 엇갈리는 평가

[China Perspective]의 이번 호에 실린 정치·경제·외교 분석이 본격적인 ‘시진핑 시대’의 진입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사회 분야의 시선은 보다 복잡할 수밖에 없다. 중공 20차 당대회 시작을 알리는 시진핑의 [보고]는 지난 10년에 대한 ‘승리적 평가’와 단결·분투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쟁취해내자는 청사진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그 승리의 시각에 상당수의 중국 여론은 상대적으로 ‘침묵’을 이어나가고 있는 묘한 상황이다.<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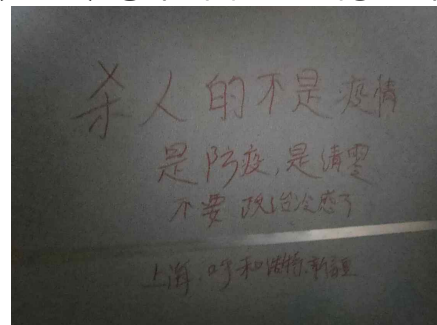
이번 중공 20차 당대회에 대한 주된 관심은 시진핑의 3연임에 쏠려있었지만, 이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자못 복잡하다. 특히, 미중 전략적 경쟁의 심화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시진핑 집권 이후 ‘권위주의화’는 중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기회를 상당부분 앗아가고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비판적인 여론과 지식인, 학자의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침묵 속에서, 중국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보다 복잡해지고, 평가 또한 엇갈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림 1〉 베이징에 걸린 현수막(10.13.)



자료출처: Twitter에서 갈무리

〈그림 2〉 중국 내에 걸린 화장실 낙서



자료출처: Twitter에서 갈무리

이번 당대회를 앞두고 베이징에 내걸린 현수막은 꽤나 충격적이었다. 중국 내 온

1) [http://www.gov.cn/xinwen/2022-10/25/content\\_5721685.htm](http://www.gov.cn/xinwen/2022-10/25/content_5721685.htm)

2) 王月眉. “习近平的“胜利时刻”: 官方大肆宣传, 民众保持沉默.” [纽约时报中文网] 2022.10.17.  
<https://cn.nytimes.com/china/20221017/pageantry-in-the-halls-of-power-but-silence-on-the-streets/>

라인에서는 일부 네티즌과 검열 당국간의 숨바꼭질 게임이 시작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화장실 낙서의 방식으로 간헐적인 저항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특히, 해외에서는 온/오프라인에서 관련 내용이 널리 퍼지면서 중국 공산당에 대한 비판의 흐름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일부는 이를 두고 "용자"(勇者)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고, 일부 언론은 중국공산당에 대한 인민 대중의 반감이 높아지고 있는 증거로 활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중국 인민과 사회가 '사회적 활화산'<sup>3)</sup>처럼 폭발할 지도 모른다는 해석은 여전히 조심스럽다. 다만 분명한 것은 많은 비판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맞춰져있던 점에서, 그 동안 엄격한 방역 정책 하에서 누적되어 온 불만과 민생 이슈를 향후 중국 정부가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샤오(项飏)는 최근 한국어로 번역된 『주변의 상실: 방법으로서의 자기』 책에서 중국식 경제발전 모델,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등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증명해보이겠다는 중국 담론 자체를 일종의 강박으로 본다. 거대한 국가와 민족의 모자를 눌러써야만 안전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어쩌면 자기 생활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흔히 '21세기 홍위병'으로 언급되는 중국 젊은 세대 가운데 다른 사고와 탐색을 모색하는 층이 있다는 이야기는, 비록 중국 공산당과 국가는 보다 권력집중의 길로 가더라도, 중국 인민의 마음은 보다 복잡해지고 다양할 수 있음을 제기해준다.

이번 호의 사회 측면 분석은 이러한 중국 사회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염두에 두고 시론적으로 중공 20차 당대회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어쩌면 중국 공산당과 국가는 현재 상황을 '위기'로 보고 나름의 최선의 방안을 구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적극적 노력과 실천이 공산당과 국가, 중앙 관료의 측면에서는 '매우 합리적'일지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중국 인민과 사회의 반응, 나아가 해외의 반응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할 수 있던 점을 지적하며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한다.

## 중공 20차 당대회: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 자신감과 위기 의식의 병존 및

3) 개혁개방 이후 심화되는 불평등이 중국을 '사회적 활화산'(Social Volcano)으로 변모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시각이 중국과 서구 모두 광범위한 입지를 확보했지만, 마틴 킹 화이트(Martin King Whyte)는 『사회적 화산이라는 신화』란 책에서 불평등과 분배 불공정 문제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 조사를 통해 대다수 중국인들이 개혁개방 이후 만들어진 새로운 시장 논리와 그로 인해 파생된 불평등을 용인하고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들도 꾸준히 제기되어왔고, 10여년이 지난 현재 수준에서 여전히 유효한지는 논쟁적이다.



## 중국식 현대화의 비전

중공 20차 당대회에서 주목해야할 바는 미중 경쟁의 심화, 코로나 대유행,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의 고조 속에서 대내 안정에 대한 강조다.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의 심화 발전 속에서 장기적 사회안정이 급속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두 가지 기적 중 하나로 손꼽혔고, 새로운 국내외 정세 변화 속에서 '중국식 현대화'란 비전이 새롭게 제시되었다. 즉, 중국 공산당은 지난 100년간의 경험과 성과를 통해 자신감을 갖추기도 했지만, '(준)전시내각'이라 칭할만큼 강한 위기감을 가진 채 강한 지도력을 통해 현재 국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해석, 또는 일종의 '선의의 해석'은 중국 공산당 엘리트가 인민 대중에 유리되어 자신의 권력 유지를 챙긴다거나, 단순히 정치 엘리트간의 내부 투쟁으로 환원시키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잘 고려하면서 나름의 합리적 해결책을 찾고 있고 중국 사회 내의 다양한 개인과 사회집단, 사회체계를 아우르는 새로운 변화를 검토할 필요를 강조한다.

〈표 1〉 중공 18-20차 당대회의 [보고] 서두

| 당대회            | [보고] 서두   |
|----------------|---|
| 18차 당대회 (2012) |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굳건히 전진하고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을 위해 분투한다            |
| 19차 당대회 (2017) |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하고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한다       |
| 20차 당대회 (2022) |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깃발을 높이 들고,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건설을 위해 단결하여 분투하자! |

자료출처: 당대회 [보고] 문건에서 저자 정리.

이번 20차 당대회는 중국 공산당이 설정한 시간표 상에서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 이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건설로 넘어가는 관건이 되는 시기다. 즉, 탈빈곤공략전의 결정적 승리로 전면적인 소강사회 실현이란 역사적 임무를 완수하고 첫 번째 백년의 분투목표를 실현한 이후, 2050년까지 부강·민주·문명·조화(和諧)·아름다운(美丽)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완성하는 출발점이다. 그 과정에서 2035

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 실현하는 관건적인 시기로서 20차 당대회이 시기가 규정된다.

하지만, 이번 [보고]에서 중국공산당의 정세인식은 자신감과 더불어 위험과 급변을 강조하는 위기 의식 또한 병존한다. 즉, 국내 정세는 전략적 기회뿐만 아니라 위험과 도전이 병존하는 시기이고, 국제 정세는 100년간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던 대변국(大變局)의 시기로서 높은 불확실성이 강조된다. 그런 점에서, [보고]에서 중국 공산당은 지난 5년의 시간이 지극히 이례적이고 평범치 않았음을 강조하고, 지금의 시기가 중국과 '중화민족'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임과 동시에, 장기간 누적되고 새롭게 출현한 돌출되는 모순과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한다. 중국공산당은 [보고]에서 당의 장기 집정, 국가의 장기 안정, 인민의 행복과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돌출적인 모순과 문제에 직면하여, 상황을 재검토하고 대담하게 전당, 전군, 전국 각 민족 인민이 단결하여 난관을 이겨내고 단합하여 이끌어낼 것을 강조한다.

물론 중국 공산당은 높은 불확실성에서도 쟁취해낸 수많은 성과들을 강조하며 '승리적 평가'를 시도한다. 지난 10년간 역사적 의미를 가진 세 가지 사건 중 하나로 탈빈곤 공략전의 완성을 내세우며 전면적인 소강사회 실현이란 역사적 임무를 완수하고 첫 번째 백년의 분투목표를 실현함을 자축한다. 또한, 돌발적인 코로나 대유행에도 직면하여 인민 우선, 생명 우선을 견지하며 전염병과의 인민전쟁을 수행하고 인민의 생명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전염병 예방통제와 사회경제발전의 조정에 중대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한다. 아울러, 인민 중심의 발전이념을 철저히 실천함으로써 교육, 소득, 의료, 양로, 주거 등 민생 영역에서 인민의 생활이 전면적으로 개선되었음을 강조한다.

〈표 2〉 중국식 현대화의 다섯 가지 측면

| 현대화의 다섯 측면     | 세부 내용   |
|----------------|---|
| 거대한 인구규모       | 전례없는 어려움과 복잡성 속에 발전경로와 추진방식 또한 나름의 특색을 가져야한다고 제시                        |
| 전체인민의 공동부유     |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필수요구이자 장기적인 역사적 과정으로서 공동부유를 강조                               |
|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조화 | 인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물질적 조건을 부단히 공고화하는 동시에 선진 사회주의 문화의 발전과 이상 및 신념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 |
| 사람과 자연의 조화와 공생 |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지하며 절약우선, 보호우선, 자연회복력 위주의 방침                                 |
| 평화발전의 길        | 전쟁, 식민, 약탈 등 방식의 낡은 길이 아니라, 평화, 발전, 협력, 상생의 가치를 들고 세계 평화/발전을 수호하며 발전 추구 |

자료출처: 당대회 [보고] 문건에서 저자 정리.

새로운 국내외 정세 변화 속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흥(이른바 '중국의 꿈')을 위한 '중국식 현대화'란 용어는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주요 내용은 〈표 2〉와 같다. [보고]는 중국식 현대화의 본질적 요구를 중국공산당 영도 견지, 중국특색 사회주의 견지, 고품질발전 실현, 전과정 인민민주의 발전, 인민정신세계 풍부, 전체인민의 공동부유 실현, 사람과 자연의 조화/공생 촉진, 인류운명공동체 건설 추동, 인류문명 신형태 창조로 정리하며,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위한 두 단계 발전전략을 내세운다.

[보고]는 2035년까지 중국 발전의 총체 목표를 경제실력, 과학기술실력, 종합국력을 대폭 약진시키고, 1인당 GDP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중등발전국가 수준으로 제고시키는 바로 제시한다. 사회 측면에서 보자면, 인민생활을 더욱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1인당 주민 가처분소득 및 중등소득집단 비중의 제고, 기본공공서비스 균등화, 농촌의 기본적인 현대적 생활조건 구비, 사회의 장기적 안정 유지와 사람의 전면적 발전과 공동부유에 실질적인 진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5년은 사회주의현대화국가의 전면건설을 시작하는 관건적 시기로서, 사회 측면에서 주요 과업은 주민소득 증가와 경제성장의 기본적인 동

보(同步), 노동계약의 제고와 노동생산성 제고의 기본적인 동보(同步), 기본공공서비스 균등화 수준의 명확한 상승, 다층적인 사회보장체계의 완성도 증대, 도시-농촌 지역 생활환경의 명확한 개선, 아름다운 중국건설 성과의 현저화 등이 제기된다.

〈그림 3〉 빅데이터를 통해 본 20차 당대회 관련 키워드의 워드 클라우드



〈표 3〉 빅데이터를 통해 본 20차 당대회 핫 키워드

| 핫 키워드   | 온라인 정보량 (건) | 누적 뷰 (회) |
|---------|-------------|----------|
| 인민행복    | 383.2만      | 46.5억    |
| 고품질발전   | 339.3만      | 37.8억    |
| 중국식 현대화 | 253.5만      | 32.8억    |
| 과학기술 혁신 | 232.4만      | 29.억     |
| 당의 영도   | 141.7만      | 26.1억    |
| 평화 외교   | 87.4만       | 22.5억    |

자료출처: [红网](2022.10.24.)<sup>4)</sup>

자료출처: 〈그림 3〉과 동일

중국 사회 내부의 반응은 자유로운 정치 토론이 이뤄지지 않아 명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일부 미디어의 빅데이터 검색을 통해 공산당의 선전과 중국 인민의 관심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인민행복 및 민생이슈가 가장 높은 관심을 받는 바는 전국 양회 등 각종 정치행사에서 드러난 트렌드와 일치하는 바이나, 이번 [보고]에서 강조된 고품질발전, 중국식 현대화, 과학기술 혁신, 평화 외교 또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보다 본격적인 분석을 위해 이번 당 대회를 앞두고 대내외적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공동부유 및 동태적 코로나 제로 정책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분석해보자.

4) 蟹黄. "深读 | 事关你我! 从大家关注的高频热词看党的二十大." [红网] 2022.10.24. <https://baijiahao.baidu.com/s?id=1747538127068706381&wfr=spider&for=pc>

## ‘공동’과 ‘부유’사이의 ‘공동부유’

이번 당 대회를 앞두고 전면적 소강사회 실현 이후의 과제로서 '공동부유'는 중국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이번 [보고]에서도 공동부유는 중국식 현대화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로서 강조되었고,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자, 장기적인 역사과정으로 자리매김되었다. 인민들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열망이 '공동부유'를 통해 긍정되었고, 사회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고 유지하는 이데올로기적 측면뿐만 아니라 양극화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서도 등장했던 점이 보다 새로운 점이다.

'공동부유'는 민생복지 증진 및 인민생활의 품질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더욱 강조되었고, 특히 분배제도 완비 부분에서 기존에 비해 더욱 구체적인 개념을 제시했다.<sup>5)</sup> 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1차 분배(시장의 기능적 분배), 2차 분배(정부의 재분배), 3차 분배(기부 등 공익자선 활동) 등 다층의 분배 조정협조체계의 구축이 명문화되었다.

아직까지도 '공동부유'는 커다란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정치적 슬로건에 그친다는 평가 또한 존재한다. 우선, 국민소득분배 중에 주민소득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1차 분배에서 노동보수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가장 강조되지만 여전히 원칙적인 내용이고, 부동산세, 상속세 등 2차 분배의 제도 또한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고 사회적 저항도 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3차 분배는 민간기업들을 국정목표에 강제로 압박·동원하면서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 또한 상당한데, 그만큼 2차 분배와 3차 분배의 제도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자본이탈 및 부유층의 해외도피 및 해외로 자산이전 등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도 크다.

하지만, '공동부유'는 개혁개방 이후 '선부론'과 함께 나왔던 오랜 유산으로, 보다 장기적으로는 어떻게든 실현을 해야하는(또는 적어도 '실현'을 했다고 주장해야 하는) 거대한 과제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공동부유는 '공동'과 '부유'의 사이에서 오가는 행보를 보일 공산이 크다. 한편으로는 개혁개방 이후 양상된 거대한 불평등이 장기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공정성의 측면이, 다른 한편으로는 점진적 확대 과정을 통해 경제 발전을 해치지 않는 효율성의 측면이 존재한다.

아울러, 중국 공산당이 제기하는 '공동부유'가 북유럽식 사회복지국가 차원이기 보다는, 여전히 발전주의의 측면에서 제기되어왔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번 당대

5) 보다 자세하게는 이번 호의 경제 부분에서 다른 내용을 함께 참조할 것.

회를 마치고도 먼저 파이를 키우고 나서 나눠야 한다는 일부 학자의 의견이 심심찮게 회자되는 것처럼, '공동부유'에 대한 개념은 국가적 발전의 측면에서 보다 강조되는 경향이 쉽게 없어지진 않을 것이다. 아울러, 2차 분배와 3차 분배의 논란이 가열되고 제도화가 늦어질수록, 개인의 노력과 열정에 더 많은 힘을 쏟을 수밖에 없음은 명확하다. 이번 [보고]에서도 더 많이 노동할수록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견지하고, 근로를 통해 부를 쌓기를 격려한다는 점이 가장 먼저 강조되기도 했고, 2차와 3차 분배를 뒷받침할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역량이 구축되는 동안 상당수의 인민에게 '공동부유'란 슬로건에 그칠 가능성 또한 높다. 더구나, 전면적 소강사회 실현에서 핵심관건이 농민층의 탈빈곤화였다면, 공동부유의 핵심 관건은 농민, 도시 빈민, 농민공 등 서민 집단을 어떻게 중산층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지에 달려있다.

## ‘동태적 코로나 제로 정책’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공동부유'가 보다 장기적 과정이라면, '동태적 코로나 제로 정책'의 변경은 보다 시급히 요구되는 사안이다. 코로나 방역에 대한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승리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간헐적인 봉쇄로 인해 누적된 수많은 불만들과 경제적 악영향으로 현재의 방역정책이 장기간 지속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당 대회 이후 정저우 폭스콘 공장에서 대규모 노동자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며 크게 이슈화되었고, 곳곳에서 강압적인 방역 정책에 대한 불만과 저항들이 심심찮게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등 그 불만을 쉽게 잠재우기는 어려울 듯 하다.<sup>6)</sup>

하지만, 중국공산당과 정부의 현재의 코로나 정책 유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하다. 11월 10일 중공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회의는 코로나 방역에 대한 보고를 듣고 방역을 더욱 최적화하기 위한 20가지 조치를 논의했음을 발표했다.<sup>7)</sup> 세계적 차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하며 유행하고 있고 중국 내에서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다, 중국은 인구대국으로 취약인구가 많고 지역발전이 불균형하고 의료자원의 총량이 부족하다는 점이 구조적 약점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바이

6) 당 대회 이후 홍콩 증시 등의 폭락은 국내 언론에서는 '공동부유'에 따른 위기감이라고 다수 보도했지만, 오히려 그보다는 코로나 제로 정책의 지속과 그로 인한 경기 비활성화에 대한 우려가 더 클 수도 있다.

7) "中共中央政治局常务委员会召开会议 听取新冠肺炎疫情防控工作汇报 研究部署进一步优化防控工作的二十条措施 中共中央总书记习近平主持会议." [人民网] 2022.11.10.  
<http://politics.people.com.cn/n1/2022/1110/c1024-32563558.html>

러스 변이와 겨울·봄의 기후요인으로 인한 대규모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 속에서, "해외로의 유입을 방지하고, 국내 확진자 반등을 방지하는" 총전략 속에 '동태적 코로나 제로정책'을 이어간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다만, 중국 내에 악명 높은 "천편일률"(一刀切)적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크게 경고하고, 전염병 예방과 통제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을 효율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을 제기하면서 성난 민심과 불안을 달래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중국 사회가 다른 사회에 비해 코로나 대유행의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통계적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중국의 엄격한 코로나 방역이 누적해온 사회경제적 악영향은 더 이상 장기 지속되긴 어렵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전환점'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여러 전문가들은 현재의 코로나 방역정책이 내년 4-5월 경에 조정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 정부가 여전히 낮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고, 당 대회 이후 여러 지방에서 격리조치가 일부 완화되는 등 그 신호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다만, 현재 1만 명이 넘는 확진자 수 증대가 겨울을 거치고 춘절 연휴의 대규모 인구이동을 거치면서 어느정도까지 확산세가 지속될 지는 주요한 지표일 것이다.

### (신)시대유감: 중국 사회를 바라보는 복잡한 시선

이번 20차 당대회는 향후 5년간 중국 공산당의 정책적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주요한 무대였다. 하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 오히려 중국 국가 및 공산당에 대한 해외의 인식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민주와 독재, 시장과 반(反)시장, 인권과 반(反)인권 등 다양한 이슈들이 이번 당대회를 계기로 더욱 확산되었고, 미중 경쟁의 심화 속에서 미국과의 대결구도가 더욱 강화되고 '중국식 현대화'의 새로운 길을 가는 모습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 또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어쩌면 그 속에서 침묵을 지키는 중국의 지식인과 학자, 일반 인민들에 대한 인식도 이러한 프레임에 더더욱 갇혀버릴 위험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지금 현재가 일종의 '세계사적 과도기'란 인식으로 바꿔본다면, 어쩌면 중국 사회 또한 한국 사회와도 유사한 고민과 구조에 갇혀있다고도 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 모두 많은 차이가 있지만 빠른 경제성장을 가능케했던 사회적 토대들이 하나둘씩 무너지면서 유사한 이슈들이 늘어나고 있음은 분명하다. 발전 방



식의 전환 및 불평등 고착화 등 사회경제적 이슈, 인구 고령화 및 저출생과 젠더 등 사회재생산 이슈, 청년 실업 및 좋은 일자리 보장 등 청년 이슈, 생태·환경 및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슈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 사회와 중국 사회는 때로는 상호 참조하고 때로는 정책적 협력을 이어나갈 필요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신)시대유감'이다. 중국이 맞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신시대'가 평화와 공존, 번영과 협력의 시대가 아니라 각종 위기와 분쟁으로 얼룩진 시대에서 진행되고 있고, 어쩌면 한국과 중국 또한 그러한 시대의 구성요소이자 하나의 요인일 수 있단 점이 '유감'이다. 더욱이, 중국 사회를 바라보는 중국 내 시선 또한 복잡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현실상 그러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논의하지 못하는 점이 더욱 '유감'이다. 아울러, 사회 측면에서 이뤄졌던 한국과 중국 간의 다양한 인적 교류와 마주침의 기회가 사라지면서, 현재 중국 사회를 이해하는 바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단 점은 더더욱 '유감'이다. 하나 덧붙인다면, 지금 전세계 정치나 경제 또한 매력적인 새로운 비전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쩌면 '세계사적 과도기'에 기존의 문법과 국가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사회 측면에서 새로운 혁신과 실험, 운동의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움직임이 아직은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유감'이다.